

## 폴란드 신정부의 경제정책

### I. 개요

- '법과정의당'(PiS당)이 이끄는 폴란드 신정부는 지난 11월 10일 마르친키에비츠(Marcinkiewicz) 총리의 대의회 시정연설 및 정책보고서(Program of the Kazimierz Marcinkiewicz Government) 제출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.
- 신정부는 과거의 취약한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 및 처방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부유층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경제성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힘.
  - 현 경제상황의 특징을 열악한 인프라, 높은 실업률, 다소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기업활동 절차, 정부부채 증가, EU 가입 후 빈부격차 증가 등으로 규정
  - 향후 경제정책으로 고용증대를 통한 경제발전, 공공재정 개선, 세제 개혁, EU 지원금의 효율적 활용에 의한 인프라 건설, 제반 사회복지 제공 등을 제시
  - 금번에 제시된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하원 신임 획득을 위해 군소정당들의 사회복지 보장 요구를 다수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, 향후 신정부가 이 경제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가 주목됨.

## II.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

### 가. 고용증대를 통한 경제발전

- 실업자 취업교육 강화
- EU 회원국 중소기업들의 대폴란드 투자 장려
- 경제활동 관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투자 촉진 및 고용 창출
  - 행정규제 완화, 인·허가 축소, 기업활동 관련 법규 단순화, 상사중재법원 효율성 증대 등

### 나. 공공재정 개선

- 재정적자를 연 300억 즐로티(약 100억 달러)로 제한
- 3개년 예산안 수립
- EU가 폴란드의 개방형연금(Open Pension Funds)을 정부재정의 일부로 간주하도록 협상(이 경우 재정적자 축소 가능)
- 고용증대를 통한 중장기적 재정 개선

### 다. 세제 개선

- 개인소득세를 2개 세율(18%, 32%)로 단순화 및 저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
- 자녀 세제 혜택
- 2006년부터 자본소득세 폐지

### 라. 사회기간시설 건설

- 정부 예산 및 EU 지원금을 활용한 고속도로의 빠른 건설
- 주택 건설 지원

- EU 지원금의 효율적 활용 절차 마련

#### 마. 민영화 정책

- 방송사, 우체국, 에너지회사, 은행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은 민영화 미실시
- 공개상장(public offering)을 통한 민영화 추진으로 증시 및 금융시장 활성화 도모

#### 바. 에너지 정책

- 천연가스 공급원 다변화 추진
- 우크라이나 원유관(Odessa-Brody pipeline)을 폴란드(Płock)로 연결
- 에너지 시장 경쟁력 강화

#### 사. 기 타

- 모든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 개선
- 농업 및 농촌 발전 정책 시행
  - 유전자변이식품 금지, 대량적 돈육·가금류 생산 금지, 농가 연료 소비세 환급 등
- 연금제도 개선
  - 개방형연금(Open Pension Funds)의 종신 혜택, 특정집단(광부 등)의 연금 수혜 특혜 근거 마련

### III. 주요 경제정책 관찰 및 평가

□ 당초 신정부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동시에 중시하는 중도적 정책을 표방하였으나, 사회복지를 중시하는 좌파 성향의 군소정당들의 지지 하에 하원 신임을 획득함에 따라 금번에 발표된 경제정책에는 동 정당들의 좌파적 요구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
- 농가 연료 소비세 환급(자주방위당측 주장), 아동 세제 혜택(폴란드가족리 그측 주장) 등 군소정당측의 요구가 반영

□ 폴란드 내에서는 신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견과 함께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임.

- 경제활동 관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기업활동 진작, 세제 단순화, EU 지원금의 효율적 활용, 인프라 개발 등과 같은 정책들은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음.

- 그러나 신정부가 세금인하, 사회복지 지출 증대, 예산 적자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정책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우세함.

- 특히 신정부가 예산적자를 300억 즐로티로 감축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행정기구의 축소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큰 재원이 들어가는 사회복지 비용(광부에 대한 연금 혜택 등)의 감축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함.

□ 향후 폴란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바, 앞으로 신정부가 금번에 제시한 경제정책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음.

- 소수정부로 출범한 신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군소정당들의 사회복지 제공 주장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할 것이 예상되면서, 이에 따른 정부지출의 증가로 경제성장의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

- 신정부가 군소정당들의 급진적 요구사항에 굴복하지 않고 경제활동 관련 규제 완화, 법률 및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병리현상을 제거함으로써 경제기반이 강화되어 경제발전이 점차 가속화되어 갈 것이라는 견해

폴란드주재원 및  
전문연구원 최은경 (☎3779-6665) 제공  
E-mail : ericachoi@koreaexim.go.kr